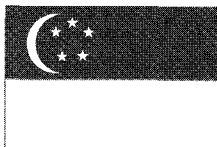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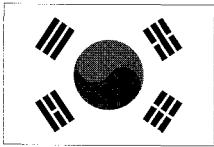


# 한-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미와 향후 FTA 전망과 과제



“한-싱가포르 FTA가 지난 11월 29일 체결되었다. 정부에서는 싱가포르가 농업 강대국도 아니고 민감한 농업부문은 상당부분 제외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농산품이 제외되었는지는 함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한-싱가포르 FTA체결은 양국에 큰 경제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동남아, 나아가서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수출교두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도 한다.

이에 한-싱가포르 FTA체결을 왜 하였는지, 그 의미를 알아보고 향후 FTA체결전망과 올바른 FTA추진방향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한다.

## ● 추진경과 및 교역 현황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 99년 9월 아시아태평양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고축통 당시 싱가포르 총리가 양국간 FTA추진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FTA논의를 벌여왔다. 싱가포르는 고 전총리의 제안 후 여러 경로로 한국에 FTA협상을 타진했으며 한국은 지난 2002년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어 2002년 11월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양국 통상장관이 FTA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에 합의했다.

그 후, 5차례 공식 협상 및 2차례 협상을 개최하여 11월 29일에 한-싱가포르 FTA는 체결되었다.

그럼 싱가포르라는 국가는 어떠한 국가이고 싱가포르와의 교역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싱가포르는 한국의 7번째 수출국이면서 11번째 수입국이다. 지난해 교역규모가 87억달러로 우리나라 교역상대 10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이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주요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부품, 컴퓨터 등으로 이들 5개 품목이 수출의 70%를 차지, 공산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2001년과 2002년에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약 22% 증가했고 자동차, 선박 등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주요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이다.

싱가포르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913억달러이며 인구는 425만명 가량이다. 1인당 GDP는 2만1478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지난 2002년 1억4600만 달러, 지난해 2억3600만달러, 올 9월까지 3억2200만달러를 한국에 투자했다.

## ● 한-싱가포르 FTA체결에 따른 예상효과

현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70% 품목이 무관세화를 실시하고 있어 FTA체결로 대싱가포르 수출이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대표적인 자유무역국가로 추가적인 관세양허가 없는 상태여서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싱가포르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석유 제품과 일부 컴퓨터 부품 그리고 국내 시장점유율이 40%인 알칼리 망간전지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싱가포르의 대 한국수출의

50% 가량은 재수출인 점을 감안할 때 제3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 ● 농업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칠레 FTA를 국민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한데 이어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것은 동아시아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고 한국이 동북아 무역 최대의 허브가 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WTO를 통한 시장 개방을 꾀하려 했으나 전세계적인 WTO반대 물결이 일어나자, 시장 개방의 또다른 방안인 FTA를 통해 장기간의 불황을 극복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 동북아 무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우리 농업계에 다시 한번 큰 풍파가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WTO/DDA협상에서 농업개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FTA체결이 예상되는 아세안과 중국은 농업 최강대국이 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정부 뿐만아니라 참여 정부도 농업 희생을 요구하여 왔고, 아세안·중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 개방의 자충수를 들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 한-싱가포르의 FTA는 단기적 교역 확대나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는 아세안과 FTA추진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고, 교두보가 확보된 만큼 농업 최강대국인 아세안·중국과의 FTA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향후 FTA 전망

외교통상부는 한-싱 FTA체결로 동남아 및 동남아 허브를 지향하는 양국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협상은 물론 내년 개시되는 아세안,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과의 FTA협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멕시코, 인도, 캐나다,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공동시장), 미국 등과의 FTA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FTA에 대해 노동계의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제조업기반이 있는 멕시코·캐나다·아세안·미국 등과의 FTA에도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4년에 미국이 주도하여 체결한 북미자유무역시대(NAFTA)가 10년이 지난 지금 실업과 고용불안, 임금저하, 여성노동 착취 등 노동계층에게 제약으로 귀결되고 있는 만큼 향후 FTA추진은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 ● 문제점은 없는가?

이번 한-싱가포르 FTA체결에 대해 정부는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아세안과의 FTA교두보 확보 차원”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의 협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지만 싱가포르가 동남아 최대의 무역국가인 만큼 우회 수출이 우려된다. 현재 FTA체결국인 칠레의 우회 수출로 정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 허브로 불리는 싱가포르에 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동남아 최대의 허브로 불리는 싱가포르에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일어날 개연성은 매우 크다. 또한 주변국이 농업 수출국인 아세안이라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둘째, 한-싱가포르 FTA를 추진하면서 전혀 여론 수렴이 없었다. 예를 들면, 일부 농산 품목이 교역 대상에 포함된 만큼 농민단체 및 농민들의 여론 수렴이 필요했다. 비단, 농업부분 뿐만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산업의 주체들과 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했다. 그래야 FTA체결 후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보다 손쉬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이번 협상과정은 회의 일정만 언론을 통해 공개할 뿐 모든 협상을 비밀리에 했다. 우선 싱가포르에 대해 분석한 결과와 교역 품목 및 비교역 품목에 대한 공개 없이 FTA를 체결한 것은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협정이 체결된 지금도 제외된 품목과 교역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하면서 협상결과를 미공개하고 여론수렴도 없을 뿐 아니라 우회 수출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체결한 것은 많은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 ● FTA! 이렇게 추진되어야...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FTA추진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올바른 FTA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농산품은 비교역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은 경제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 있는 외국 농산품들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의 농업 붕괴는 시간문제이고 농업이 붕괴되면 농민들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안보가 무너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통상협상에서 각국의 민감 품목은 제외시키고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농업도 350만 농민들 생존권 및 국가 식량안보 유지 차원에서 선진국의 예처럼 자유무역에서 보호될 수 있다.

둘째, 국내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FTA를 체결 시 어쩔 수 없이 농산품을 교역대상에서 포함시켰다면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칠레와 FTA가 발효된 지 1년도 안되어서 과수산업의 붕괴 위기가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 대책 없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온다. 이에 이러한 국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상대적 이익을 얻는 비농업분야 산업의 이익이 농업으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재원은 소모성 지원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농촌과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셋째, 통상협상과정에서 FTA체결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칠레 FTA를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을 했지만, 정부의 당초 예측은 점점 빗나가고 있다. 물론 일부 반농업적인 언론이 한-칠레 FTA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칠레 수출액 증가보다 농산물 수입액의 증가가 상회하면서 무역흑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 2~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과수산업뿐만 아니라 과수산업에서 타작목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농업 전체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FTA는 철저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한-칠레 FTA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고 FTA체결 전에 상대국과 체결에 따른 손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산업을 대표하는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싱가포르와의 협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협상 결과의 공개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손익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보고서를 찾아 볼 수가 없다. 특히, FTA제외 품목 및 교역 품목에 대한 공개는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데, 체결된 지금도 정부는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에 협상과정 시 각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연구부터 같이 참여하여 여론 수렴을 하고 각 협상 결과는 국민적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한동원**

### ▣ FTA의 올바른 추진방향

첫째, 농산품을 비교역품목으로 지정하여 교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농산품을 수입을 한다면 생산기반 및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FTA체결국에 대한 철저한 계량적인 분석 및 자료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협상 결과의 공개와 각 직능대표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